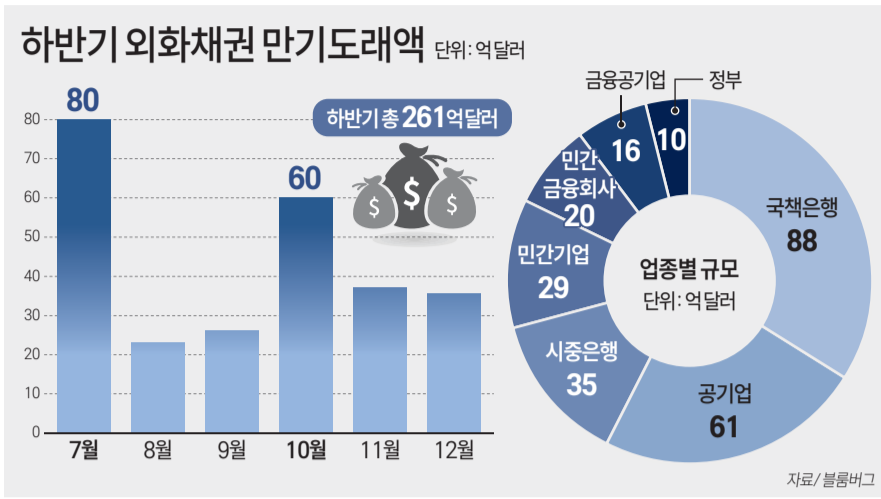


# 글로벌 큰손 몰린 한국채권, 하반기 美 금리 변수에 '긴장'

국내 기업 외화채권 발행 흥행  
하반기 외화채권 시장 부담 증가  
벤치마크 금리·가산금리 부담에  
자금 조달 비용 높아질 가능성



채권은 5년 만기 5억달러(약 7700억원) 규모의 단일 트랜치(만기 구조)로 발행됐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0.9%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총 주문 규모는 발행액의 네 배 수준인 20억달러어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최초 제시금리 대비 0.3%포인트 축소된 수준에서 최종 발행하기로 결정됐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똥질남'으로 통하던 국내 기업들의 얼굴에 햇빛 그림자가 드리웠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다. 11월 중간선거에 따른 변동성도 우려된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한국 공기업과 기업·금융기관이 갠야할 외

화채권은 261억달러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많다. 특히 7(80억달러), 10월(60억달러)에 전체 만기 물량의 54%가 집중돼 있다.

업종별로는 국책은행이 약 88억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61억달러), 시중은행(35억달러), 민간기업(29억달러), 민간금융회사(20억달러), 금융공기업(16억달러), 정부(10억 달러) 등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하반기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가장 큰 걱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다. 케빈 위시 연준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내려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

장의 예상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지만, 위시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

새로운 물가상승 요인도 시장을 짓누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내린 점은 물가 하락 요인이지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도 존재한다.

그는 기업들의 가격 결정 방식도 인플레이션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행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안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커지고 있어 비용 상승분을 얼마나 제품 가격에 전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물 크레딧(신용도)도 개선되고 있고 투자 수요도 많아만 가는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벤치마크 금리의 하방이 제한되는 가운데, 역사적 저점까지 축소된 가산금리 역시 추가 타이밍(투자자 입장에서 낮은 금리라도 투자 의사를 보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부담은 있다"고 전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하반기 투자적격등급(IG) 스프레드의 완만한 확대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다. JP모건은 연말까지 미국의 IG 스프레드가 85bp(1bp=0.01%포인트)에서 95bp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HSBC는 미국 IG 및 아시아 IG 스프레드가 각각 10~20bp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기업들이 갠야할 돈이 4분기에 집중되는데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맞물려 있어서다. 이는 시장 소화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주혜원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과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스프레드 레벨이 추가 축소될 여력은 제한된 반면 금리 변동성 확대·공급 부담·위험회피 심리 등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큰 비대칭적 구조다"라면서 "발행자들은 시장 변동성 및 투자수요 여건을 감안해 발행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상반기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420억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26억달러)보다 약 29%(94억달러) 많다. 만기 도래분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111억달러를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거래소,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50곳 전망

이달부터 상장 유지 요건 강화  
'동전주 퇴출' 기준도 손질

코스닥 출범 30주년을 맞아 시장 저평가 해소 일환으로 부실기업 퇴출 정책이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코스닥 상장사가 올해 50개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성천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커넥트 2026'에서 부실기업 퇴출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자로 나서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상장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전반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총 및 추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의 시총이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서 200억원을 일정 기간 밑돌면 상장폐지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

김 팀장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코스닥에

서 시총 기준 미달로 올해 상장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 중"이라며, "아직 코스닥에서 (강화된)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으나, 다음달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추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추가가 1천원을 상회해야 하는 '동전주 퇴출' 규정도 기업들이 우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김 팀장은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가 더 어렵도록 이번에 강화했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총이나 동전주 요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상장 폐지된다"라며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인 경우에도 이의신청 없이 상장 폐지하게 한 점 역시 이번에 강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종

목 수는 각각 9개, 13개다. 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각각 9개와 35개였다.

한편 바이오·AI·우주 등 기존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로봇·K-콘텐츠·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심사기준을 이번에 도입하는 데 대해 자금 조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석우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각 산업과 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산업 육성 및 자금 조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사의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전통 제조업과는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는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광산 등 추가 혁신 업종에 대한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닥 혁신기업 키우고 부실기업 퇴출 강화

기술특례기업 상장·사후관리 확대  
혁신산업 맞춤형 심사·저PBR 관리

출범 30주년을 맞는 코스닥시장이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부실기업은 퇴출을 앞당기고, 성장기업은 상장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며 '신뢰 회복'과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전날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 데 이어 기술특례상장 사후관리 강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복수의결권주식 상장 허용 등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을 시행하며 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 신뢰·혁신 제도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기업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된다. 지금까지 기술특례·이의 미실현 특례상장 기업은 일정 기간(3~5년) 매출액과 대규모 손실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와 미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술특례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은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장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특례상장의 전제가 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혁신기업을 위한 상장 지원도 확대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우주·에너지 분야에 질적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도 맞춤형 기준을 추가 신설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근거를 상장규정에 마련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분기 연속 하위권인 기업을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밸류업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법인 상장이 허용된다는 내용을 상장규정에 반영했다. 대상은 보통주이며, 최대주주 외에 의결권 기준인 '최소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해 의무부유와 경영안정성 심사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복수의결권 구조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장치도 함께 심사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도 본격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 KSD나눔재단, 취약아동 의료비 1억 후원

중증·희귀·정신질환 아동 26명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이 지난 1일 초록우산에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과 초록우산은 다문화·탈북·난민 등을 포함한 전국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심사를 진행해 중증·희귀·정신질환

아동 26명을 선정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기로 했다.

이윤수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기를 희망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설립됐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장학·



이윤수 KSD나눔재단 이사장(왼쪽)과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